

# 보도자료



담당자 이소희 선임비서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29호 TEL 02-784-4631

배포일 24년 1월 13일 (월)

## 헌법부정 · 내란선동 한 김용원 등...인권위원 사퇴하라

- 고민정 민주당 인권위원장 “허위사실로 내란동조, 선동까지 해 인권위 명예 뺏개쳐”
- 안창호 위원장은 안건 폐기하고 상정에 대해 사과해야...
- 안창호 인권위의 인권유린에 모든 법적 조치 강구할 것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들이 13(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항의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인권위 전원위에 내란 범죄자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내용으로 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제출한 김용원 인권위원 등의 사퇴 등을 촉구했습니다.

아래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의 현장 인사말을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 고민정입니다.

오늘 인권위 전원위에 상정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은 즉각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사실들이 넘쳐날 뿐 아니라 내란동조 및 선정·선동의 지경까지 이르러 대한민국 인권위의 명예를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이들로서 해서는 안될 해괴망측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문건에 이름을 올린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은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정한 법률에 따라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 안전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190명 등이 국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친 사람들이 있는지와 다친 정도에 대하여는 드러난 것이 없으며, 국회의 기물 파손 등에 관하여도 집계된 것이 없다.”

→ 거짓.

→ 확인 결과, 계엄 당시 월담이 확인된 국회의원만 79명이며 그 중 골절 및 부상을 당한 의원은 40명입니다. 국회 본관 정현관 자동문 파손을 비롯해 수많은 비품과 시설들의 피해상황을 국회 사무처가 집계해 놓은 상태입니다.

둘째,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보면...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요구를 거부한 것이 유일한 사유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 거짓.

→ 한덕수 탄핵소추안에는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의 법률 위반,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등 여러 요건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97년 계엄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 이라고 판시하였고, 이러한 법리는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법리를 부정하는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 거짓.

→ 대법원 판례를 확인 결과, 다수의견은 설령 쿠데타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내란을 통한 법질서 수립은 인정될 수 없으며 해당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면서 의도적으

로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내용을 취사선택해 허위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 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인권위 권고안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가짜뉴스를 전파시키고 있는 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넷째, “헌법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에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헌법 부정행위

→ 헌법 제65조 1항에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다섯째,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장관이나 군지휘관, 경찰청장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 내란선동죄

→ 국방부장관 등은 사전에 대통령과 내란을 모의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9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모의참여자의 모의에 대한 판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모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족하다라고 판결요지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는 것이 마땅. 위법적인 계엄을 따르는 것은 내란 공범의 길

여섯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설사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또는 구속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그 집행에 나서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이다.”

→ 내란선동죄

→ 해당 내용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집행을 부정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물론 제2의 내란행위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인권위 전원위에서 해당 안건은 논의되는 것 자체가 국가 망신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당장 안건을 폐기하고 상정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더불어 내란공범자들이 준비한 포고령에 실린 인권유린 내용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을 밝히십시오.

또한 최상목 대행은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서 내란을 선전·선동한 행위입니다.

안창호의 인권위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끝>